

음식점 원산지표시 조기 정착위한 홍보 시급

구이용 외 탕, 보쌈 등 적용품목 확대를 체계적 단속 및 정부의 제도적 보완 필요



▲ 돼지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실시로 둔갑판매 방지 및 국산 돼지고기 소비확대에 대한 양돈농가의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지난 12월 10일 한국 언론재단에서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주최로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 확대 조기정착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가 개최됐다.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음식점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계도와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10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주관으로 한국언론재단에서 개최된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 확대 조기정착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법률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천주 회장은 원산지표시 확대에 따른 영업자 의식조사를 통하여, 상반기 원산지표시 의무대상 업소의

식육원산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지 5개월이 경과한 시점인데도 46.4%가 부적합 업소로 확인됐으며, 향후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통업체로부터 발급받고 있는 거래명세서상의 식육원산지에 대해 94.5%가 신뢰한다는 조사결과를 볼 때, 음식점에서는 거래명세서를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유통과정에서의 원산지표시 단속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영업자 대상 거래명세서 발급 필요성에 대한 교육 및 정부의 제도적인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음식업중앙회 이충호 부회장은 "좋은 제도와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행정적인 뒷받침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고 전제, "현재 발급되고 있는 거래명세서의 의무화나 제도권밖에 있는 음식점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양돈협회 김동환 회장은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구이용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보쌈이나 탕류, 부산물 등 다른 품목까지 폭넓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음식업중앙회 홍희경 국장은 음식점자들이 모르고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돈**